

일제하 민족해방운동—제주도를 중심으로

일제하 제주도는 육지부와 떨어져 있는 고립된 섬이지만 일제의 침탈을 육지부 못지않게 받았으며, 그에 대한 반발과 저항 역시 매우 강력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해방 이후 인민위원회의가 강력하게 존속하였고, 남한의 변혁운동세력의 역량이 소진되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민족해방이 전개되었던 지역이다. 따라서 일제하 제주도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검토는 1948년 제주민중항쟁(4.3)의 전사(前死)를 규명하는 작업으로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1919년 3월 전국에 걸쳐 전개된 3.1만세 시위운동은 제주도에도 그 여파가 미쳤다. 서울 회고보생이었던 김창환이 서울 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가 귀향하여 고향(조천면)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3월21일에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피검된 자가 모두 29명에 이를 정도로 일제에 일정한 타격을 가하였다. 3.1운동 이후 제주도의 청년지식인들은 수학, 의학, 농학, 철학 등의 청년단체와 보통학교, 야학, 개광서당(의숙) 등의 교육기구를 중심으로 대중에 계몽활동을 전개하고, 1923년에는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던 민립대학 설립운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몽운동 중심의 도내 민족해방운동은 일제의 개량과 정책으로 말미암아 한계점을 드러냈고, 청년단체의 간부들 사이에는 일제에 타협하여 면장에 취임하는 자들도 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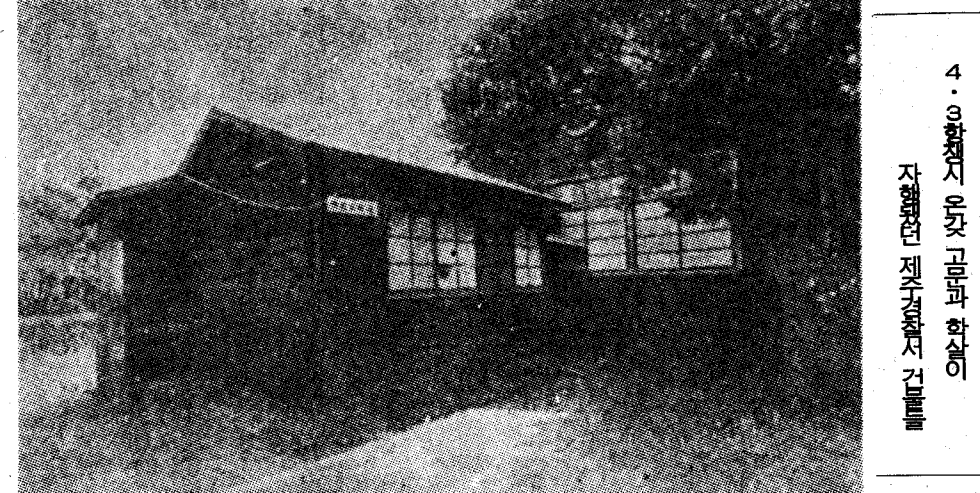
이와 같은 흐름에 반발하여 타협과 친일의 길을 거부하던 청년들은 대안으로 사회주의사상을 받아들였다. 이미 1920년대초에 조선에 유입된 사회주의사상은 계몽운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져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제주도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김택수, 한상호, 강창보 등의 급진청년들은 1925년 3월 제주도 최초의 사상단체인 신인회를 조직하여 제주도 사회주의운동의 선구자로서 주요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이들이 중심이 되

어 1920년대 후반의 제주청년연합회, 조선공산당 제주야재이카, 제주청년동맹과 같은 전체 상부조직의 건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1928년 8월 일제의 제4차 조선공산당 검거로 말미암아 크게 위축되었다. 이 당시 운동은 청년지식인을 중심으로 전개됨으로써 생산대중 속에 파고들지 못하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코민테른 12월 테제(1928)에 의하여 시정되어갔다. 12월테제에서는 노동자, 농민을 토대로 한 하부조직을 중심으로 상부조직을 건설할 것을 운동방침으로 정하였다. 또한 일본 대판에 거주하는 제주도 출신 운동가들에 의하여 발표된 제주도 농민요구투쟁동맹운동에 관한 테제(1931)도 제주도 운동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 테제를 통하여 제일 제주도출신 운동가들은 제주도에서의 운동이 빈농과 일반에서 귀한 노동자를 축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운동방향의 선회에 따라 제주도 운동가들은 1930년 이

는 1932년 11월 제주도에서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청년조직과 소년조직을 점차 관세조직으로 흡수하여 갔다.

그러나 이러한 약진 속에서 도내 민족해방운동은 지하에서 다시 소생하였다. 재건 야재이카의 책임자였던 강창보는 1932년 3월의 기습검거로 체포되었으나, 유치장을 탈출하여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는 제주도를 탈출하기 위해서 3명의 동지를 선정하여 그들이 중심이 되어 제주도 운동을 재건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어서 김두경의 노력에 의하여 1932년 10월 제주도 적색농업조합의 조직이 논의되었다. 1933년 1월에는 부병훈, 김경봉, 김일준 등이



1935년을 중심으로 지하화하거나 그 주도세력이 육지부나 일본으로 도피하여 버리게 되었다. 비록

4.3항쟁시 운동과 학살의 자취를 찾아 제주도를 걷는다

항일투쟁경험 인민위원회 건설로 연결돼
납세불납, 노동자파업 주도했던 '제주야재이카'

야재이카 구성원들의 대거 검거로 말미암아 각지의 청년조직과 소년조직, 농민조직은 침체되었다. 또한 사회주의자들에게 대한 대중들의 신뢰는 떨어졌다. 일제

모어 제주도 적색농업조합 준비위원회를 정식으로 창설하였다. 그들은 각자 거주지를 중심으로 농민의 생활상태를 자료로 삼아 농민조합과 같은 하부조직의 확

년 10월 62명이 검거됨으로써 농조 건설에는 결국 실패하였다. 이후 1935년 애월면과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비밀조직도 일제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1939년 조선에서 김시용, 김유환, 안세훈, 현사선 등이 중심이 되어 소비조합운동을 지속시키면서 일제의 전쟁 도발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전과 같은 조직

4.3관련 한림지역 현장조사 사례발표

I. 4.3현장채록의 필요성

4.3의 진실규명에 있어 가장 부족한 점은 1차 실증자료의 빈곤이다. 4.3에 대한 논의가 80년대 이후 미국에 대한 재조명 작업과 함께 학계에서도 밀도있게 진행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2차 자료에 근거한 논의들이라 진실규명에는 거리가 많았다. 실증적인 작업은 역사규명의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2차 자료에 근거하여 역사의 현재적 의미만을 강조하였던 것이 80년대 이후의 4.3논의가 아니었다. 4.3에서 1차 자료라던 4.3현장채록들이 남긴 기록, 경찰의 문건, 미군정의 보고서, 당시의 신문 등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1차자료들은 현실적으로 좀처럼 찾아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방법은 증언채록을 통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4.3증언채록작업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그 작업의 성과는 1989년부터 나타나, 비로소 도내의 신문, 잡지 등에서도 4.3증언채록집이 발간되기도 하였다. '한림을 전후하여 오성찬씨의 '태극의 통곡소리'(1989년 소나무 출판사), 제주4.3연구소의 '이제사 말해준다'(1989년 한울출판사)' 1, 2권 등의 4.3증언채록집이 발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장을 한번이라도 들어가 본 사람은 알겠지만 4.3증언 채록작업은 똑같은 사실도 증언자가 사설을 어떻게 인식했느냐에 따라 얘기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 보통이다. 그 다음은 단순한 표현의 차이로 넘어서 사건 자체를 다르게 만들어나간다. 또한 채록자 사설의 진실여부가 어떤 입장적 관점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채록했는가에 따라 똑같은 사건이 다르게 파악되기도 한다. 역사적 사실의 진실여부를 비롯하여 증언을 좀더 신빙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료와의 비교작업을 통해서 증언을 1차자료로 올려놓아야 한다. 여기

에는 세밀한 검토작업, 실증작업으로 부터 출발해서 그것을 새롭게 해석해내는 작업도 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과작업을 거치지 않고 증언을 그대로 옮겨놓았을 때는 무리가 따르게 된다.

II. 한림면 증언채록 준비과정

지역을 설정해 놓고 증언채록 작업에 들어갈 때 우선 그 지역에 대한 문헌자료를 섭렵하여 시기별, 사안별로 정리하여 질문서를 만들고 되돌아 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림면의 경우도 비슷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질문서는 사전 기초자료로 참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현장에 들어가보면 질문서대로 물을 수 있는 증언자는 사실 몇명 안된다. 1차로 만나보고 난 후에 증언자의 이력, 당시에 처한 위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차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완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일제시대 제주도의 행정편제는 여러 번에 걸쳐 조정되어져 왔다. 한림면도 1935년까지는 구우면으로 불린다. 그러나 1935년 행정구역 명칭이 전도에 걸쳐 대폭 바뀌면서 구우면은 한림면으로 개칭된다. 그후 1956년에 한림면의 한림읍으로 승격되면서 당시까지 한림면에 속해 있었던 23개 리 중 11개리가 한림면으로 분리되었다. 우리가 조사한 지역은 지금의 한림읍에 속하는 12개리(귀덕리, 수원리, 한림리, 대림리, 동명리, 상명리, 명월리, 금암리, 용포리, 삼대리, 협재리, 금릉리)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림면으로 분리된 11개리(명월리, 금릉리, 판포리, 신창리, 두모리, 용수리, 고산리, 낙천리, 조수리, 저지리, 정수리)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과거 한림면에 속했던 23개리를 모두 조사할 수 있었으면 4.3당시 한림면 전체상황을 더욱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증언채록은 1990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증언을 시기로 정리하는 과정

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47년 3월까지 한림면인민위원회는 한림면의 모든 행정을 실질적으로 관장한 유일의 지방자치 기관이었다고 볼 수 있다.

흔히 '4.3의, 도화선'이라고 표현되는 1947년 3.1운동 때 한림면에서는 5-6천명의 인파가 한림국민학교에 모여 기념식을 거

는데, 음력 정월 명절(2월 10일) 전후에 있었던 일로 기억하고 있었다. 모든 증언자가 가장 잘 기억하는 부분은 5.10단선 거부투쟁이었다. '이 선거를 하면 우리나라가 반 쪼가리로 된다'는 산쪽의 선전이 주효하였던 4.3을 전후하여 수많은 경찰병력이 제주도



4.3항쟁 당시의 끌려가던 게릴라의 모습

군경의한 집단학살 제사날 집중 기현상 불러
좌·우익 갈등아닌 제주민중 對미군정의 대립구조

다. 8.15 당시 한림면은 다른 지역보다 일본군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면민위원회에서는 우선적으로 이들의 면민들에 대한 청문회 따위 하고 마을의 질서를 잡아야 하기 위해 청문회, 하위대 등을 조직하여 치안유지에 힘썼다. 또한 산하에 산업부를 두어 500-600명의 공원이 일하는 용포리 동조리공장, 동아물산(전분공장) 등의 직산관리를 담당하였고, 문교부(교육부)를 통해서 학교의 관리, 교사의 채용 등 지역민 '교육'에 필요한 일도 하였던 것이다. 미드의 표현처럼 '1945-46년 당시 제주도인민위원회는 당시 모든 면에서 제주도 유일의 정당이었고 정부'였다. 당시에 도지사가 마을치안 당부를 위한 공문을 보낼 때도 한림면 경찰지서장 앞으로 보내기 전에 한림리 청년동맹 위원장 앞으로 먼저보낼 정도였

행했는대 평화적으로 무사히 마쳤다. 그러나 제주읍에서의 불상사로 한림면도 각 관공서를 비롯한 공장, 학교, 상점 등이 문을 닫았다.

이때 한림면 공동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당시 부면장으로 있던 분이었는데, 이후 구속되고 병보석으로 나오는데 과정 속에 입산 아니던 제주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그에게도 닥쳐왔다. 현재 80세 고령으로 투병중인 그 분 부부를 만날 수 있어 미군정정 재판에 회부되어 형을 받은 재판과정의 구체적 정황을 들수 있었던 것은 다른지역에서 얻지 못하였던 성과였다. 이후의 상황은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2.7투쟁 4.3투쟁, 5.10단선 거부투쟁 등으로 숨가쁘게 이어진다.

2.7투쟁 이야기는 중산간 마을인 명월, 금암에서 들을 수 있었

에 파견되어 경비가 강화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림면에서도 12개리 중 7개리가 선거를 거부했다. 중산간 마을에서 선거가 이루어진 데는 한군데도 없었다. 선거를 거부한 마을에서는 어둑한 새벽에 하루 양식 끊어지고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두 셋배로, 눈으로, 정물으로 등으로 울라갔다. 그들이 지냈던 곳은 그 오름 밑에 있는 제(자그마한 웅양동굴)인데 특히 눈으로 밑에는 게가 많이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족으로 숨었다. 한림면은 북제주군 읍구에 속했는데 결국 투표인수가 모자라 다음 해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5.10이후의 상황은 토벌대에 의한 대대적인 수색과 대토벌, 집단학살로 이어지고 산사람에 의한 약탈, 방화 또는 면민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어 '산도 무섭

들이기 때문에 현상황의 보수적인 구조 속에서 자기신변의 보호를 위하여 보다 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당시 참여했던 활동이 회자될 때 과거적인 태도, 방법들이 계속 추적할 수 있고, 또 그것에 기존의 2차문헌자료를 비교하면서 확인하는 작업을 더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것이다. 광주에서 5.18 증언작업을 하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려는 광주같은 경우, 불과 10년밖에 안 되었어도 그 당시의 자기가 보고 들은 과정에 대해 실제로 체험해 보지 않은 것조차 자기 경험으로 입입하여 말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불과 10년 전의 체험도 그러한 건데 40년이 지났

은 보살피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별 어려움 없이 증언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다. 어느 지역 어느 사람을 만나도 가장 쉽게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림면의 경우는 1948년 10월 이후 중산간소개가 있고 나서 해안부락으로 소개된 명월, 금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집단학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한림면에서 금암, 명월은 그 지역의 명망있는 유지들의 가족 전부가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조직에 적극 참여하여 마을 전체를 통솔하고 있었고 산파도 가까와서 5.10전 거점에 웅만한 젊은이들은 마을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 결과 이 지역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쉽게 토벌대의 희생물이 되었던 것이다.

이 지역에서 제사가 많은 날은 음력으로 6월 13일(주로 한림읍

중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하 운동가들은 중년의 나이로 해방정국에 제정당하여 건국과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제하 살전으로 보여주었던 운동경력이 도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쉽게 당시 정국을 주도할 수 있었다. 결국 일제하 제주도 민족해방운동의 전통이 해방정국 운동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박 찬 식
(제주대 강사·사학)

지동), 7월 7일(예비검속자), 11월 18일(주로 명월리 사람), 9월 13일(주로 금암사람)등인데 모두 군, 경에 의한 죽음들이다. 금릉과 용포는 한림면에서도 거의 군, 경의 피해를 입지 않았던 부락들이다. 오히려 금릉리는 1948년 11월 3일 산쪽의 방화로 40여 채의 집이 불타고 6명이 목숨을 잃었던 마을이다. 언제 죽은지도 모르는 유족들은 생일이나 집을 나간 날에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1948년 가을에 소개된 중산간 마을들이 재건되어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갈 때는 1953년이였다.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많았던 명월, 금암을 비롯한 대부분의 마을은 옛날의 기계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 이에 얽여 버린 마을도 꽤 있었다.

IV. 앞으로의 과제

한림면 증언채록을 마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1차 문헌자료 발굴의 중요성을 실감하였다. 과학적인 체계적인 규명을 위해서 증언작업 못지 않게 실증작업을 써야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이제까지는 어느지역을 가더라도 우리가 이쪽 저쪽에서 얻어들은 것을 토대로, 또는 김봉현 등의 한림면의 자료를 참고하여 질문할 수 밖에 없었는데 제주신보의 채록을 갖고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작업이 훨씬 쉬웠다. 직접 자료를 나와있는 사안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작업을 위해서 이따금 저사람에게 가서 묻는 수고가 없어도 되고 막대한 기억을 상기시켜내는 역활도 한다. 이렇듯 4.3진상규명의 1차적 과제는 실증자료의 확보이다. 그런데 자료확보의 어려움은 제주신보가 40년 넘게 최근이 발간된 예에서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것도 겨우 1년분에 불과하다. 그리고 중요한 구슬을 해줄 분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 또한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도 우리는 서귀포의 중요한 증언자 한 분의 부고에 접했다. 연구소가 극복하지 못한 증언대상의 한계, 즉 당시의 경찰, 군인, 미군정에 관련되었던 사람, 서장 등의 증언채록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나 이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의 노력을 간절히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당시 제주도민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는 제민일보가 밝혔듯이 1947년 2월 22일 충남북 소속 경찰 200명이 내도할 때 이 내용을 제주경찰청 내로 몰랐다는 사실, 함덕 해수욕장에 있던 수영소에서 며칠을 지낸 아저머니가 제주도출신 경찰은 육지 경찰들과는 같지 못했었다는 말 등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3.1절 발표도 육지출신 경찰에 의해 일어났다. 경찰의 내부적 상태가 이러한 건데 일반 제주민들의 처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4.3을 좌우의 싸움으로 파악하려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4.3의 대립구조는 결국 제주민중과 미군정이었지 같은 민족내부의 싸움이 아니었음을 실증적 자료로 밝혀내야 할 것이다.

양 성 자
(제주4.3연구소 연구위원)